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목차

1: 지난 60년의 회고: 建國-産業化-民主化

2: 21세기 국가목표: 선진화 革命

첫째; 선진화 제1단계

둘째; 선진화 제2단계

3: 선진화란 무엇인가: 先進國의 5대 조건

첫째; 경제적 선진화: 일인당 소득 1만 불의 향아리형 경제

둘째; 정치적 선진화: 포퓰리즘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로

셋째; 사회적 선진화: 君子와 교양인의 사회

넷째; 문화적 선진화: 多문화 共生사회

다섯째; 국제적 선진화: 世界貢獻국가

4: 선진화의 목표: [國家理想]으로의 선진국

5: 대한민국의 꿈: 5대 조화사회

첫째; 물질과 정신의 조화

둘째;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셋째; 과거 현재 미래의 조화

넷째; 민족과 세계의 조화

다섯째; 지도자와 국민의 조화

6: 선진화의 哲學: 共同體自由主義

첫째; 공동체자유주의란?

둘째; 왜 공동체자유주의여야 하는가?

7: 21세기 세계화시대의 특징

- 첫째: 過富裕化(over affluence)의 시대
- 둘째: 메가 競爭(mega competition)의 시대
- 셋째: 危險사회(risk society)의 시대
- 넷째: 生態위기(ecological crisis)의 시대
- 다섯째: 新 통치구조(new governance)의 시대

8: 세계화시대의 정책적 함의

- 첫째: 構造調整의 常時化
- 둘째: 열린 思考와 유연조직
- 셋째: 關係性과 共助강화
- 넷째: 새로운 正體性的의 창조

9: 우리 민족의 3대 特長

- 첫째: 會通의 사상
- 둘째: 正名의 철학
- 셋째: 力動의 문화

10: 선진화 5대 戰略

- 첫째: 세계화 전략
- 둘째: 자유화 전략
- 셋째: 분권화(多主體化)전략
- 넷째: 自尊의 정신과 공동체강화
- 다섯째: 국가 및 사회리더십 개혁

11: 선진화 主體세력: 國民統合과 3대 주체

- 첫째: 국민통합: 개혁적 保守와 합리적 進歩
- 둘째: 선진화 정치세력
- 셋째: 선진화 정책세력
- 넷째: 선진화 국민운동

12: 맺는말: 제2의 위대한 도약을 향하여

1: 지난 60년의 회고: 건국- 산업화 - 민주화

금년은 건국 60주년이다. 지난 60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여러 좌절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크게 보아 발전과 성공의 역사였다. 지난 60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建國과 近代化 혁명(산업화와 민주화)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세계 제2차 대전 후 세계최빈국의 하나였던 후진국에서 중진국의 선두주자로 성큼 뛰어 오르면서 21세기에 진입하였다.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우리는 1945년 해방된 이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1948년의 建國을 이루어 냈다. 36년간의 외국 지배 후에 독립된 국민국가(nation state)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자유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다음에는 6.25의 비극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護國에도 성공하였다. 그 후 1960년 초부터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産業化의 길로 일로매진하였다. 그 결과로 압축 고도성장에 성공하였다. 1960년대 초 일인당 GNP 80불의 最貧國에서 1995년에 1만 불수준의 중진국으로 성큼 뛰어 올랐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이 지구상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압축적 고도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가 없었다. 한마디로 [한강의 기적]이었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는 국가예산의 40% 그리고 국방비의 75%를 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고 당시의 평균 실업률은 35% 정도였다. 요약하면 1960년대 초 우리나라 경제는 당시의 아시아의 스리랑카나 아프리카의 가나 수준과 비슷한 세계최빈국의 하나였다. 그러던 나라가 2006년 말 1인당 국민소득 1만 8천불, GDP 8,800억 불, 무역액 6,300억 불로 경제규모 세계 12위, 무역규모 세계 11위를 달성하는 나라로 발전하였다.

또한 우리는 1980년대와 90년대 민주화에도 성공하였다. 1950년대와 60년대 대한민국을 본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물론 지난 기간 민주주의의 후퇴와 파행도 있었고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그러나 결국 우리는 1987년을 轉機로 하여 민주화(절차적 민주주의)에도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60년간을 크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과 호국]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근대화 혁명]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2: 21세기 국가목표: 선진화 革命

한반도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 1881년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개화를 서둘렀고 1884년 급진 개화파(김옥균, 박영호 등)에 의한 갑신정변, 1894년 온건 개화파에 의한 갑오경장 등의 開化自強운동이 있었다. 1896년에는 독립협회(서재필 이승만 등)가 등장하여 독립신문을 내고 萬民공동회의를 중심으로 愛國啓蒙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화를 위한 몸부림 들은 결국 실패하고 우리는 36년의 오랜 식민시대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다. 1945년 해방 후에는 10년 이상을 건국과 호국에 시간을 바치고 결국 본격적 근대화는 1960년 초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본격적 근대화가 60년 이상의 지체된 셈이었다. 그러나 늦었지만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화 민주화라는 근대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면 근대화 혁명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향후 지향하여야 할 21세기 국가목표 내지 국가과제는 무엇인가? 아니 무엇이어서 하는가? 한마디로 향후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국가목표 내지 국가과제는 남과 북이 모두 선진화혁명에 성공하여 [통일된 선진조국]을 건설하는 것, 환언하면 [한반도 전체의 선진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한반도 전체의 선진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21세기 통일된 선진조국의 건설, 즉 한반도의 선진화는 2단계를 통하여 성취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선진화 제 1 단계: 南韓의 선진국 진입의 단계와 北韓의 근대화 혁명의 단계

제 1단계는 남한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진입에 성공하는 단계이고 동시에 북한도 개혁개방을 통하여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서서히 민주화의 방향으로 들어서는 단계이다. 이 제 1단계는 향후 10-15년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남한은 앞으로 10-15년 안에 반드시 경제적 선진국에 진입하여야 하는가? 여러 이유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의 인구변화를 보면 남한은 향후 10년 이내에 생산인구(15세부터 64세)가 줄기 시작하고 향후 15

년 이내에 총인구가 줄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높은 경제성장률(예컨대 매년 6%정도가 되어야 향후 10년 이내에 일인당 국민소득 약 3만 불 수준(2005년 가격)의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을 이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조건이 같아도 인구감소 자체만으로 2% 정도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북한은 왜 10-15년 안에 근대화혁명에 성공하여야 하는가? 그 주된 이유는 북한에서 개혁과 대외개방 없이 지금과 같은 非정상적 실패국가(failed state)의 상황이 향후 10- 15년 지속되면 [북한 전체의 砂漠化]가 급진전되리라 보기 때문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근대화 혁명을 추진할 인적 물적 정신적 자원자체가 회복불능의 상태까지 고갈되고 파괴되어 버릴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기간 안에 북한이 正常國家化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산업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민주화는 산업화가 어느 정도 성공한 그 이후의 과제가 되어도 좋다.

둘째, 선진화 제 2 단계: 南韓의 선진화 완성과 北韓의 근대화 성공 이후 선진국 진입의 단계.

제2단계는 남한이 선진국의 先頭走者가 되는 단계이다. 단순한 경제적 선진국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적 기여도에서도 명실 공히 세계 일등국가인 선진국이 되는 단계이다. 동시에 북한도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근대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고 선진국권에 진입하는 단계이다. 이 제2단계 선진화는 제 1단계 선진화가 끝난 후 최소한 15년 전 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 된다.

이 두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한반도는 늦어도 2035-2040년경에는 세계선진국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앞으로 우리는 약 한 세대 이내(30년)에 1900년 대 초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꿈꾸어 왔던 [세계 上等국가]가 되어야 한다. 명실 공히 세계 일류국가인 성숙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약 100 년 전 즉 1907년 우리나라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의 선언문 중에는 우리나라가 언젠가 세계의 상등국가가 되기를 희망하며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이 있다. 지금부터 100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꿈꾸고 갈망하였던 [세계 上等국가]가 오늘날 우리가 목표로 [한반

도의 선진화]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3: 선진화란 무엇인가? : 先進國의 5대 조건

그러면 선진화란 무엇인가? 선진화란 간단히 이야기 하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목표로서의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한민국이 세계일류국가, 세계상등국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경제적 선진화 : 일인당 소득 3만 불의 [항아리 型] 경제

우선 경제적으로는 2005년 가격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최소한 3만 불 수준에는 들어가야 한다. 2005년 현재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내인 나라는 전 세계국가 약 220개국 중에서 오직 20개국뿐이다(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덴마크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벨 지움 캐나다 프랑스 호주 독일 이태리). 따라서 경제적 의미의 선진국이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소득국가 20개국(G-20)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선진국이란 단순히 국민소득이 높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국민소득이 비교적 고르게 분배되어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평균 국민소득은 높지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평균 국민소득도 높지만 소득분배가 중산층(중위 60%)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항아리 型 경제]를 이루어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때,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이 높은 사회가 成長親和的인 사회분위기를 수반하여 親성장적 정책과 제도를 가지기 쉽고 그 때문에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쉽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또한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이 높은 사회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적어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고, 그 결과로 높은 경제성장률의 지속이 보다 용이하고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러한 [성장 친화적 항아리형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전략이

소위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참여하는 [低邊이 넓은 성장전략](broad-based growth strategy)을 추구하여야 한다. 거대기업 등 소수만이 주도하는 성장만으로는 소득의 분배를 악화시키기 쉬워 소위 [양극화 축소형 성장]을 이루어 내기 어렵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물론 저소득층이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민모두에게 세계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경쟁제한적인 독과점구조의 시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영세소득층에 대한 취업과 창업지원 등도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란 높은 생산과 소득을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분배가 비교적 공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시 강조하지만 경제성장과정에 저소득층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기여하는 성장전략을 선택하여야 한다. 아니 시장이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소위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피할 수 있고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나갈 수 있다.

둘째, 정치적 선진화: 포퓰리즘(populism)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로

정치적으로 선진국이란 [절차적 민주주의(procedural democracy)]의 단계를 지나 [실체적 민주주의(substantive democracy)]의 성공까지 이루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민주화의 단계]를 지나 [자유화의 단계]를 성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명실 공히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달성하는 것을 정치적 선진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80-90년대 민주화를 이루었으니 21세기 우리의 과제는 [자유화]이고 [실체적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그러면 민주화는 무엇이고 자유화는 무엇인가? 민주화는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정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를 [절차적 민주주의(procedural democracy)]라기도 하고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혹은 협의의 민주주의(thin democracy)라기도 한다. 그러면 자유화는 무엇인가? 자유화는 이렇게 선출된 정부가 국민의 존엄과 생명,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하늘처럼 떠받드는 정부가 될 때 비로소 자유화까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민주화와 자유화 즉 민주주의와 자유

주의가 결합될 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성립하게 된다. 이를 [실체적 민주주의(substantive democracy)] 혹은 [광의의 민주주의(thick democracy)]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21세기 우리나라가 정치적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자유화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의 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화의 단계를 지나 자유화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포퓰리즘(populism: 대0중영합주의)이다.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정치적 선동가가 등장하여 대중의 일시적 정서에 맞추어(혹은 대중정서를 조작하며) 국정을 인기 영합적으로 운영하면 법치와 원칙이 무시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위협받고 부정되기 쉽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소위 非자유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이다. 민주화는 되었는데 자유화에 실패하는 경우이다. 요즘 지구위에는 비자유민주주의가 생각보다 많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선진 歐美國가들은 자유화가 민주화보다 먼저 왔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 때부터 시작된 자유화가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자유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에 성공한 후에 민주화 즉 절차적 민주주의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1820년대에는 국민 중에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는 5%에 불과했고 1920년 초에도 50%에 불과하였다.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이 1920년대 후반이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모두가 참여한 투표를 통하여 정부를 선택한다는 의미의 민주화(절차적 민주주의)는 20세기 초반 이후의 변화이다. 이와 같이 구미국가들의 역사는 오랜 자유화의 역사 이후에 민주화가 시작되었다 즉 先자유화 後민주화였다. 그래서 민주화가 되면 비교적 쉽게 안정된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다른 非歐美國가(아시아 남미 등)들은 歐美國가들과는 정반대로 先민주화 後자유화의 길을 걷고 있다. 즉 자유화의 전통 없이 민주화가 먼저 시작되었다. 즉 이들 나라에서는 자유주의의 전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세계 제 2차 대전 후(1945년 이후) 선진국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그래서 민주화가 진행되어도 자유화의 부족으로 자유민주주로 쉽게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非자유민주주의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非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정치적 포퓰리스트(populist)에 의한 愚衆政治로 발전하여 정치적 민주화의 실패뿐 아니라 경제발전의 실패까지, 더 나아가 국가실패까지 결과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포퓰리

즘은 단기적인 정치적 인기에 연연하여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한 올바른 제도와 정책개혁을 피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선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의 극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하여야 한다. 하나는 [법치주의](rule of law)의 정착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정운영에서의 [대중주의와 엘리트주의]의 조화이다. 주지하듯이 법치주의는 便宜(rule of expediency)의 지배가 아니라 原則의 지배(rule of principle)를 의미하고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력의 恣意를 제한하는 것(limiting government)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포퓰리즘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치주의를 세워서 [편의와 인기의 지배]가 아니라 [법치와 원칙의 지배]를 정착해야 한다.

다음은 국정운영에서의 대중주의와 엘리트주의와의 조화가 중요하다. 즉 국정운영에서 [대중성과 전문성의 조화]이다. 민주화는 대중의 목소리, 다수의 목소리를 크게 만든다. 민주화는 본래가 [소수의 지배]를 [다수의 지배]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수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형상이다. 문제는 그것이 과도하여 소위 국가운영의 전문성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데 있다. 소위 [過剩 민주주의(excessive democracy)]의 문제가 그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목소리, 대중의 요구를 존중하되 그 즉흥성과 격렬함을 전문가들이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쏠림현상이 강한 나라에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대중의 요구를 일정부분 견제하고 순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환언하면 다수의 지배가 단순히 [량의 지배]가 아니라 [質의 지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를 위하여 우리는 선거를 통하지 않은 [非선출직 국정운영자(un-elected officials)]들을 제도화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얻은 국민적 지지 때문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전문성에 때문에 국가운영을 맡기는 제도가 있다. 사법부의 법관, 행정부의 직업공무원, 중앙은행 등이 그러한 제도들이다. 이들이 [선출직 국정운영자(elected officials)]인 대통령과 국회가 인기영합에 빠지기 쉬운 것을 견제하고 순화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 부가하여 국정운영의 대중성보다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제도인 대학,

싱크탱크, 언론들도 일정한 비판적 기여를 한다.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국회] 對 [법원과 공무원, 그리고 대학, 싱크탱크, 언론]사이의 상호 견제와 조화, 즉 대중성과 전문성간의 균형과 견제와 조화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법치주의가 정착하고 국정운영의 대중성과 전문성이 서로 조화되어야 소위 대중융합주의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비로소 정치적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선진화: 君子와 교양인의 사회

사회적으로 선진국이란 公益과 私益이 잘 조화되어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면서도 공동체에 대한 자발적 배려와 기여수준, 그리고 책임의식이 높은 사회를 의미한다. 즉 한마디로 [公私調和의 사회]이다. 물론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보장하는 제도의 하나가 법치이다. 그러나 법 이전에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등으로 공과 사의 이해의 대립을 상당부분 조화할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이와 같이 [사회도덕과 국민윤리]의 수준이 높아서 도덕적 윤리적 자기절제를 통한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굳이 법의 개입 없이도 이웃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자연스럽게 개개인의 행동에 나타나는 사회이다.

그런데 이러한 높은 수준의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는 사회구성원이 소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易地思之(imaginary change of situations)의 능력]이 높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본래 이렇게 역지사지의 능력이 높은 사람을, 그리하여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자기절제능력이 높은 사람을 동양에서는 [君子 혹은 선비]라 하였고 서양에서는 [紳士 혹은 教養人]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의 [군자와 교양인이 많은 사회]를 선진사회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민주화 과정에서 한 가지 경계하여야 할 것은, 잘못하면 일체의 기존가치와 권위를 부정하는 [대중의 暴民化] 경향이 나타나서, 그 사회의 군자와 교양인을 냉소하고 비난하고 부정하는 경향이 발생

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그 사회는 만인이 만인과 싸우는 서로 욕하고 부정하는 賤民사회가 되기 싫다. [低품격의 사회]가 되기 싫다. 그것은 분명 선진사회가 아니다. 따라서 선진사회가 되려면 역지사지를 통하여 이기적 사욕을 억제하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군자와 교양인이 많아야 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易地思之를 하게 되면 우선 그 사회가 信賴社會(trust society)가 된다.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를 속일 수도 없고, 약속을 어길 수도 없다. 서로가 상대를 믿고 그 믿음을 기초로 자신의 행위를 계획하게 된다. 상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불신의 벽을 넘어 [상호신뢰의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001년 세계가치관조사를 보면 [낮선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스웨덴에서는 66.3%가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일본은 43.1% 미국은 36.3%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27.3%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 일반적 신뢰수준이 낮은 편이다.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이 서로 역지사지를 하게 되면 다음으로 그 사회는 저절로 인정이 넘치는 多情社會(compassionate society)가 된다. 서로 역지사지하면 상대의 필요와 어려움을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 도움을 주려 노력한다. 더구나 자신도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상대를 배려하게 된다. 한마디로 역지사지를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人情사회로 발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적극적인 이웃사랑과 이웃나눔의 활동이 저절로 일어난다. 그리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일상화되고 이를 통하여 크고 작은 共同體운동(community movement)이 일어난다. 이러한 의미의 [자원봉사형의 공동체운동]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다. 미국에는 약 140만개의 자원봉사조직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성인의 과반수가 주 4시간 이상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공익을 위해 출연한 크고 작은 재단이 약 40만개 나 된다고 한다. 선진국이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他山之石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적 선진국: 多문화 共生사회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하

나의 조건은 우선 [多문화 共生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다른 문화, 다른 민족, 다른 종교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배우려는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신의 문화 종교 민족에 대하여 독선적 자세와 다른 문화 종교 민족에 대하여 배타적 자세를 가져서는 문화선진국이 될 수 없다.

둘째의 조건은 다문화 공생의 단계를 넘어서 자기 민족의 전통문화의 장점과 異國문화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세계문화표준]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문화든 나름의 特長이 있을 수 있다. 自國의 문화와 異國의 문화를 결합하고 융합하여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글로벌 문화]를 창조할 수 있어야 문화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의 융합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국민 다수가 높은 수준의 문화이해력 내지 문화해독력(cultural literacy)을 가져야 한다. 자국의 문화는 물론이고 이국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해독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인류의 보편적 성품과 정서에 호소력을 가지는 새로운 문화표준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한 나라가 多문화 공생사회를 이루고 더 나아가 자국의 문화와 이국의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세계문화표준을 창조할 정도의 [문화 해독력과 창조력]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나라를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국제적 선진화: 세계貢獻국가

국제적으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선진국이란 인류의 보편적 발전에 기여하는 [世界貢獻國家]이다. 인류는 오늘날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당면해 있다. 핵과 테러의 문제, 인종전쟁과 실패국가(failed state)의 문제, 빈곤과 질병의 문제, 지구온난화와 에너지부족의 문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범지구적 통치구조(global governance)의 취약의 문제, 가족의 붕괴와 정신적 황폐화의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문제의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다.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 지구촌이익을 고민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평화, 인권, 반핵, 빈곤퇴치, 환경, 생태, 등 소위 지구적 공공재(global public goods)를 생산하는데 앞장

서 기여하는 나라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그래야 이웃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이란 군사적 경제적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뛰어난 [문화력과 외교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학술 종교 도덕 등의 [정신적 자본(mental capital)]이 있어야 한다. 소위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강해야 한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많이 가진 나라가 그리하여 이웃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모범국가 매력국가가 바로 국제적 의미의 선진국이다.

4: 선진화의 목표: [國家理想]으로의 선진국

이렇게 선진국을 여러 측면에서 정의하여 보면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화는 오늘날 지구위에 실재하는 선진국 중의 어느 한 나라와 비슷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위에서 우리가 선진국 5대 조건으로 정의한 나라는 사실상 오늘날 지구 위에 실재하지는 않으나, 우리가 희망하는 가장 바람직한 선진국, 즉 [21세기적 理想國家]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진화가 지향하는 이상적 선진국을 富民德國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덕 있는 나라]라는 뜻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목표는 [理想國家로서의 대한민국의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다. 개인에게도 꿈과 이상이 있듯이 국가에게도 꿈과 이상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꿈], [대한민국의 이상]은 무엇인가? 그 꿈과 이상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모습은 무엇인가? 모든 국민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한국적 선진국], 우리의 역사와 풍토, 문화와 정서에 잘 어울리는 [동양적 한국적 선진국]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이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선진화이다. 따라서 선진화는 기본적으로 [모방적 선진화]가 아니라 [창조적 선진화]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0년간 우리는 식민지에서 벗어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기아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하여 왔다. 이 모두가 [과거의 잘못된 질서]와의 싸움

이었다. 이 투쟁에서 승리하여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제는 中進國의 선두에 서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와의 투쟁과정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꿈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이상이 무엇인가? 우리는 앞으로 과연 어떠한 나라를 만들려 하는가? 에 대하여 깊이 성찰해 볼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동안 [미래의 바람직한 질서]를 깊이 있게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서있다. 이제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진국을 만들려 하는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꿈과 이상은 과연 무엇인가? 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성찰해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이상]은 무엇인가? [동양적 한국적 선진국]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분명 어느 한 사람이 답할 몫은 아니다.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모색과 합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우선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이러한 모색과정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의 참여까지 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集團智(collective wisdom)와 集團熱情 (collective aspiration)을 모두 동원하여 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꿈과 이상을 찾아가는 과정, 발견하여 가는 과정, 창조하여 가는 국가적 국민적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결과를 모든 국민이 다 수용하고 시인하는 단계에 이를 때 그 대한민국의 국가이상은 곧바로 국민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國是가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21세기 대한민국의 國是]를 세우는 노력, 즉 [창조적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쓴 하나의 試論이 바로 이 글이 된다.

5: 대한민국의 꿈: 5대 조화사회

우리사회에 창조적 선진화를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필자가 생각하는 국가이상에 대한 소견의 일단을 밝히도록 한다. 생각건대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지향해야 할 [국가이상으로서의 선진국] 즉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21세기 理想國家],환언하면 [동양적 한국적 선진국]의

모습을 定性的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5가지가 잘 조화된 사회(5대 조화사회)가 아닐까 한다.

첫째, 물질과 정신의 조화

우선 우리의 국가이상은 국민경제가 높은 생산성과 소득수준을 가진 사회이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물질적 풍요는 선진사회 성립의 기본조건일 수밖에 없다. 경제가 허약하고 실업과 빈곤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면 이상국가일 수 없다. 그래서 상당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보장하는 [생산성이 높은 경제]는 기본이 된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성숙과 같이 가지 아니하면 그 사회는 粹富 사회 내지 賤民사회가 된다. 물질적 풍요나 편안함에는 본래 인간의 정신력을 약화시키는 毒素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질적 풍요에 걸 맞는 정신적 발전 내지 성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종교의 하나인 甌山敎에서는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정신의 발전과 성숙이 함께 일어나야 가족해체, 마약과 범죄, 소외와 차별, 등 소위 [선진국병]을 고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화는 [선진국병이 없는 선진화]이다. 요컨대 선진국병이 없는 [경제強國과 정신大國]이 공존하는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이상이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개인의 행복추구와 공동체적 가치존중이 함께 가는 사회여야 한다.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와 선택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호되면서도, 공동체적 연대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존중되고 강화되는 사회가 바로 우리의 국가이상이다. 그동안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자주 二元論과 극단론이 지배하여 왔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강조하는 것이 지나쳐 공동체적 연대나 가치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공동체의 중요성과 가치를 중시하다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억압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가치, 즉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는 서로 모순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본래가 서로 균형되고 조화될 때 비로소 개인도 공동체도 모두가 한 단계 높게 발전하고 성숙하는 법이다. 선진국이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가치가 높은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균형되고 조화되는 사회이다. 법치를 가지고 국가가 외적 강제를 통하여 양자의 조화를 시도하기 이전에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자각이 내적 자율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회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 양자의 조화가 비교적 아름답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나라로 보터 [東方의 禮儀之國]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국민다수가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는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즉 두가치의 조화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따라서 앞으로 [21세기 동방의 예의지국]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이상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개체와 공동체가 조화되는 이상적 선진국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셋째, 과거, 현재, 미래의 조화.

우선 과거와 현재의 조화가 중요하다. 현재 속에 살아 있는 과거역사의 功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과거역사의 過에 대한 반성이 오늘날 살아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사회, 선진국의 모습이다. 과거역사에 대한 일방적 부정, 미움, 거부, 학대, 그리고 공격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부모의 세대와 조상의 세대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면서 오늘을 올바르게 살 수 없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밝은 내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 부모의 세대, 조상의 세대의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무조건 과거를 美化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에는 항상 明과 暗이 있다. 문제는 무조건 부정이나 무조건의 긍정이 아니라 명과 암을 균형 있게 보면서 역사의 밝은 면을 계승 발전시키고 어두운 면을 반성 극복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한마디로 [發展的 繼承의 均衡史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다수가 그러한 역사관을 가져야 성숙한 선진국이다.

다음은 현재와 미래의 조화가 중요하다. 오늘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다음에 올 후손들의 삶의 조건을 결정한다. 예컨대 우리가 오늘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 아니면 회피하는가 하는 결정이 다음 세대들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오늘의 우리가 환경 파괴적 생산과 소비를 억제하면 할수록 우리의 후손들의 삶의 질과 조건은 좋아진다. 그 반대는 물론 후손들의 삶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과의 조화가 중요하다. 후진국이란 오늘에 보다 많은 가치를 두고 내일에 대한 배려의 수준이

낮은 나라라고 한다면, 선진국은 오늘보다 내일에 대한 배려의 수준이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은 보다 [親환경적이 되고 親지구적 국가]가 된다. 즉 환경문제 생태문제를 포함하여 쏠지구적 문제(핵 빈곤 질병 에너지 등)의 해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가 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국가이상으로서 선진국]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와 미래간의 대화와 소통이 있고 利害의 조화가 잘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민족과 세계의 조화.

자기민족과 자기나라에 대한 사랑이 [배타적 독선적 민족주의]로 발전하여서는 [국가이상으로서의 선진국]이 아니다. 물론 자기민족 자기국가에 대하여 애국애족의 마음과 자존의식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선진국과 중진국의 경제발전의 근본동인의 하나가 애국심(patriotism)에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Spirit of Capitalism: Liah Greenfield,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애국심과 자존심 그리고 자긍심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고 덕목이다. 이 덕목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애국심이 自存과 自矜에서 시작하여 반드시 自強으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自強은 반드시 [多문화 多민족 多종교의 共生사회]를 세울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생사회를 만들어 문화융합 민족융합 종교융합 사상융합이 일어날 때 비로소 세계화 시대 요구되는 세계최고의 창조성(world class creativity)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창조성을 가지고 인류의 보편적 발전을 위하여 인류공동의 고민과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세계공헌국가]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국가이상으로서의 선진국의 모습이다.

다섯째, 지도자와 국민의 조화.

어느 사회, 어느 조직이든 지도자가 있고 국민대중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이상국가로서의 한국적 선진국 속에서 지도자는 반드시 지도자다워야 하고 국민은 반드시 국민다워야 한다. 君君이고 臣臣이다. 임금은 임

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즉 지도자는 리더십(leadership)이 있어야 하고 국민은 팔로워십(followership)이 있어야 한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修己治人이고 先公後私이다. 철저한 자기수양을 통하여 私心을 억제하고, 학문을 통하여 국정운영 능력을 기른 후에, 공직을 맡고 혼신의 노력으로 滅私奉公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 아무런 수양도 학문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自己修養이 깊고 公人精神이 뚜렷한 유능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판단과 행동에 있어 국민의 이익을 가장 앞세워 나가야 한다. 환언하면 爲民정신과 民本意識(民本主義)이 모든 지도자 원리의 기본이다.

다음은 국민대중의 자세가 중요하다. 지도자를 뽑았으면 믿고 따라야 한다. 나무에 올라놓고 흔들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정치무관심과 냉소주의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共和主義的 市民意識(republican citizenship) 즉 公民意識이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끊임없이 조화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국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고 그리고 책임을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公民의식이 바로 국민대중이 가야할 길이다.

지도자와 대중간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과 성숙한 조화는 정부는 물론 기업 학교 노조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에 해당한다. 이러한 모든 조직의 발전은 그 조직의 장과 조직원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조직의 장이 지도자답고 [爲民정신]이 뚜렷하면 그리고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公民의식]이 뚜렷하면 그 조직은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한 조직이 되고 성공하는 조직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행복조직, 성공조직이 많은 사회가 우리의 국가이상으로서의 선진사회라 할 수 있다.

이상의 5대조화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꿈]인 [국가이상으로서의 선진국]이 아닌가 생각한다.

6: 선진화의 哲學: 共同體自由主義

[國家理想으로서의 先進國]이 되기 위한 선진화는 확고한 철학에 기초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철학이란 국가의 [구성원리] 내지 [운영원리]로서의 철학

이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본제도와 질서를 어떠한 원리에 기초하여 만들어야 하고 어떠한 원리에 기초하여 운영하여야 우리가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의미의 철학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든 국가제도와 정책(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공동체 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의 방향으로 개혁하고 운영하여야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자유주의에 역행하는 구성원리, 즉 자유주의를 부정하거나 공동체의 가치를 거부하는 철학에 기초하여 국가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그러한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선진국진입에 반드시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무엇이 공동체자유주의이고 왜 공동체자유주의여야 선진화가 가능한가를 보도록 하자.

첫째, 공동체자유주의란 ?

공동체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란 한마디로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이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무엇보다 먼저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개인의 존엄과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본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개인행복과 국가발전의 원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 개인의 자유가 너무 과도하게 강조되어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각자의 성찰적 배려와 자율적 책임을 요구한다. 여기서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민족이나 계급의 가치를 강요하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나 [집단주의(collectivism)]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공동체의 강조는 어디까지나 외적 강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토론과 교육, 소통과 설득으로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를 만들자는 것이다.

본래 자유주의란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국가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상이다. 그래서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지키고 보호하려 노력한다. 본래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자유주의적 인간관]은 인간을 무한의 존엄성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보고, 인간에게 최고의선은 그 무한의 가치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인격완성과 자아실현]이 인간사회의 최고의 선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개개인의 인격완성과 자아실현은 [自由社會(free society)]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

가의 목표내지 존재이유는 이러한 자유사회를 보장하는데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주의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런데 인간은 본래가 [個體的, 個性的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關係的, 共生的 존재]이다. 우리 인간은 시간적으로 역사 속에서 존재하며, 공간적으로 사회를 떠나 살 수 없고, 또한 항상 자연 속에서 숨 쉬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역사공동체] [사회공동체] [자연공동체]를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 세 가지 공동체 속에서 인간은 존재하고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고 성장하고 번창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자유만능주의][자유절대주의][自由原理主義]일 수많은 없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훼손하는 자유만능주의, 자유절대주의, 자유원리주의는 결국은 관계적, 공생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실재적 모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 자유주의자체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가 인류발전의 원동력인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지속가능한 자유주의]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반드시 [공동체 가치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이어야 한다.

둘째, 왜 공동체자유주의여야 하는가?

왜 공동체자유주의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즉 공동체자유주의는 [인류발전의 보편적 원리]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자유주의를 따르면 인류는 발전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퇴보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은 지난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쉽게 입증된다. 최근 세계적 경제사 연구가의 한 연구에 의하면 BC 1,000경 당시 지구인들의 일인당 년 평균 소득은 요즈음 가격으로 약 \$150 정도로 추산된다. 그런데 AD 1750-1800년의 지구인들의 일인당 년 평균소득을 같은 방식으로 추산하면 약 \$180 수준이다. 즉 지난 약 2-3000년간 인류의 물질적 풍요의 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 기간 중 생산성 증가율(기술진보 속도)은 년 평균 약 0.05% 정도로 미미했다. 약간의 생산성과 소득 상승이 있어도 곧 인구증가가 뒤따라서 성장을 잠식하여 버렸다. 한마디로 대단히 오랜 기간 인류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생활을 하여 왔다.

그러나 1750-1800년 이후 역사는 크게 바뀌게 된다. 2000년 현재 지구인 평균의 일인당 년 평균소득은 약 \$ 6,6000이다. 지난 200년간 \$180 수

준에서 \$6,600 수준으로 급격한 도약을 한 셈이다. 인류의 긴 역사에서 보면 분명 하나의 기적이었다. 어떻게 이 기적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유주의 때문이다. 이 자유주의는 경제적으로는 [교역의 자유]와 [시장의 자유] 즉 [교역과 시장의 확대]로 나타나고, 정치적으로는 [사유재산권의 보호], [국가의 경제규제와 개입의 축소] [법치주의의 확산]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다. 이들이 모두 중요하나, 특히 교역의 자유와 시장의 확대가 중요하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주장대로 노동생산성은 노동의 분업과 특화(specialization)의 수준과 정도(degree of specialization)에서 오고, 분업과 특화의 수준과 정도는 [시장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시장의 규모가 커야 보다 세분화된 높은 수준의 분업과 특화가 가능하고 그 결과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지난 200년간의 [마을시장]에서 [지역시장]으로 나아가 [국민시장]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시장]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시장의 확대가 엄청난 분업의 발전과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확대는 물론 사유재산권의 보호, 교역자유 확대, 정부의 경제개입의 축소(세금과 규제의 법제화) 과학기술의 발달 등과 함께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자유주의의 확대]가 바로 인류역사 속에서 지난 200년의 기적을 만든 주원인이고 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모든 나라가 이 기간 동안 같은 속도의 발전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성장이 빠른 나라도 있고 느는 나라도 있었으며, 같은 나라도 발전이 빠른 시기도 있고 느는 시기도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발전의 緩急을 결정하는 것일까? 시대는 이미 크게 보아 자유주의의 시대로 진입하였다면 자유주의 안에서 무엇이 발전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추구하는 자유주의가 어떤 자유주의이냐에 의해 다른 결과를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의 내용이 공동체가치를 존중하는 [共同體 자유주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반면에 공동체가치를 무시내지 부정하는 [利己的 자유주의]는 반드시 지속적 발전이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공동체 가치와 연대를 경시하고 파괴하면 결국은 자유주의자체가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성장과 발전이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는 성장과 발전은 지속된다.

결국 우리의 자유주의가 [공동체 자유주의]일 때 발전하고 그러하지 못할 때 발전이 지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난 200년간의 인류의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 볼 때 당연히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철학은 [발전과 지속가능의 철학]인 [공동체자유주의]가 아니 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공동체자유주의라는 [국가의 구성원리와 운영원리]를 기초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각각의 분야에서 선진화제도를 만들고 선진화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

다음에 다룰 과제는 선진화 전략과 정책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하기 전에 두 가지 문제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하나는 우리가 선진화를 추진해야 할 이 시대, 21세기 세계화시대는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가진 시대인가? 다른 하나는 우리 민족은 어떠한 特長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가 하는 문제이다. 시대적 특징은 선진화를 위한 객관적 조건이고 민족적 특장은 주관적 조건이기 때문에 선진화전략과 정책을 논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 보아야 할 과제들이라고 본다.

7: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의 특징

1989년 11월 베르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東西冷戰의 시대가 끝났다. 그러면서 세계는 하나가 되기 시작하였다. 1986년부터 시작한 우르과이 라운드(UR)의 성공적 타결과 1995년 WTO의 출범이 더욱 세계를 빠르게 하나로 만들어 갔다. 여기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세계는 이제 작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세계는 지속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빠르게 작아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우리는 지구촌의 시대,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라고 부른다. 이러한 의미의 세계화의 시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과 구조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과 문제들은 우리가 선진화 전략을 수립할 때 깊이 생각하여 많이 반영하여야 할 문제들이다.

첫째, 過富裕(over-affluence)의 시대

새로운 文明史的인 [도약의 기회]가 열리는 시대이다. (1) 신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능력의 한계와 자연의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시켜 주고 있다. 또한 (2) 시장의 확대 특히 지구촌시장의 등장이 분업의 세분화와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여 제한된 자연자원 속에서도 인간의 노동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그 결과로 인류의 물질적 풍요는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富裕의 시대]를 지나 [過富裕의 시대]를 열고 있다. 특히 에너지나 부존자원의 양을 생각할 때 분명 과부유의 시대이다. 물론 이러한 과부유는 지구촌 전체의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빠른 속도로 부유화는 진행되고 확산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오래 된 인류의 꿈의 하나인 절대빈곤의 문제는 점차 해소되고 있다.

둘째, 메가 競爭(mega-competition)의 시대

국가간 지역간 기업간 개인간 세계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대이다. 세계가 빠르게 작아지면서 과학기술경쟁과 시장확대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경쟁에서 승리하면 그 보상이 크고(지구적 규모가 되고) 또한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반대로 실패하면 큰 추락을 피할 수 없다. 성공의 이익도 실패의 비용도 모두 커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뛰고 있다. 개개인들도 각자의 세계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끊임 없이 새로운 교육과 향상 훈련을 받고 있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과 학교 등 모든 조직들도 자신들의 세계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끊임 없이 지속적인 構造調整(structural adjustment)을 필요로 한다. 세계경쟁이 요구하는 [평생학습과 常時的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나라에선 세계화는 성장의 둔화, 분배의 악화를 결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경영의 여건변화속도가 빨라 경쟁 자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속도와 구조조정의 속도도 문제가 되는 시대이다.

셋째, 危險사회(risk society)의 시대.

금융위기와 안보위기의 국제적 확산이 격화되는 시대이다. 세계가 빠르게 작아지면서 (1) 세계적 금융위기와 (2) 非전통적 안보위기의 국제 확산이 보다 쉬워지고 있다. 세계화가 되면서 국경을 넘어 [사람과 상품과 정보]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위험]도 함께 이동한다. 세계금융시장은 급속도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고, 국제간 자본이동의 크기와 속도가 빠르게 증대하여 시장이 더욱 불안정하고 시장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무역

투자 등의 실물 거래와 아무관계 없는 돈의 흐름이 커져서(소위 decoupling 현상) 이제는 예측 불허의 돈의 독자적 흐름이 실물에 큰 영향을 주는 불안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동시에 테러 마약 질병 핵 확산 종교분쟁 인종분쟁 등 非전통적 안보위기가 국경을 쉽게 넘나들며 전파되고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산업화시대의 平生雇用論(lifetime employment)과 20세기적 福祉國家論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개인은 기업으로부터의 안정된 직장보장이나 정부로부터의 충분한 사회보장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개인은 평생학습강화 등으로 자신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지 아니하면 비정규고용, 실업 등으로 내몰리게 될 위험이 더 높아진다. 한마디로 위험사회(risk society)가 열리고 있다.

넷째, 生態위기(ecological crisis)의 시대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급격한 지구환경 변화의 시대이다. 이와 더불어 지구촌 인구의 급증, 산업화의 가속화, 에너지와 자원의 부족, 식량문제의 악화 등의 문제도 점차 격화되고 있다. 21세기 세계가 빠르게 하나로 작아지면서 지구자원의 생태적 한계가 더욱 드러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거대인구의 신흥 산업화국가가 등장하여 21세기적 자원 제약적 환경 속에서 20세기적 산업화, 즉 자원과 에너지의 과다소비형 산업화의 방식을 걷고 있기 때문에 지구환경과 자원의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

다섯째, 新 통치구조(new governance)의 시대.

새로운 통치구조(governance)가 요구되는 시대이다. 세계의 수준에서도 개별국가의 수준에서도 새로운 통치구조가 요구되는 시대이다. 세계경제는 빠른 속도로 단일시장 [단일구조]로 편입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세계정치는 아직 국민국가(nation-state) 중심의 [복수구조]이다. 따라서 경제와 사회의 세계화가 가져오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응 해결하는 세계적 차원의 정치구조가 없는 셈이다. 즉 세계화에 수반되는 금융위기, 안보위기, 환경위기 등의 문제를 지구촌(세계이익)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다룰 정치구조, 즉 지구적 차원의 효과적 세계통치구조(effective global governance)가 없다는

말이다. 세계정치는 아직도 개별국가 즉 국민국가단위의 국가이익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통치구조(state governance)는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흐름을 적극 활용하여 자국의 발전과 도약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혁과 개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과 개방이 가져올 고용불안과 분배악화 사회갈등의 격화 등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풀어 나갈 통치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상의 다섯 가지의 구조적 문제를 가지는 세계화의 진전은 선진화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정책적 함의를 주고 있는가?

8: 세계화시대의 정책적 함의

첫째, 구조조정의 常時化

우선 환경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모든 개인과 조직이 새로운 환경에 맞게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을 常時化하여야 한다. 개인이던 조직이던 끊임없는 자기변화 즉 [개혁의 상시화]가 필요하다. 개인은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과 평생훈련의 길로 나가야 하고, 정부 기업 학교 등 모든 조직은 상시 구조조정체제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도약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열린사고와 柔軟조직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사고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창조적이어야 한다. 생각이 非창조적이거나 경직적이어서는 환경변화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없다. 개인 뿐 만아니라 정부 기업 학교 등 모든 조직도 항상 변화에 열려 있어야 하고 항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조직은 현장 중심으로 분권화되어 있어야 한다. 아니 현장밀착형으로 多主體化되어야 한다. 닫힌 조직, 경직적인 조직, 그리고 거대한 중앙집권적 조직은 21세기 성공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셋째, 관계성과 互助강화

자기변화에도 능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세계가 빠르게 작아지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성, 지역과 지역과의 관계성은 물론이고, 한 나라 안에서도 나와 이웃과의 관계성이 과거보다 보다 긴밀해지고 상호작용적이며 상호의존적이 되고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이 다른 나라와 함께 협력하고 공조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coordinating capacity)을 길러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국민국가단위에서 자기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국제테러 금융위기 등 모든 문제가 一國主義로 풀 수 없는 과제들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얼마나 잘 협력하고 공조할 수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진다.

다음으로 우리는 먼 이웃나라 뿐 아니라 가까운 어려운 이웃의 삶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계화로 인한 상호관계성의 증대는 우리와 이웃 간의 공동운명체적 성격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보다 자연의 유한성이 커지면서 자연과 생태에 대한 보다 적극적 관심이 요구된다.

넷째, 新 정체성(new identity)의 창조

세계화 정보화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개인이던 조직이던 자기정체성을 새롭게 창조하여야 한다. 기술조건과 생활환경의 변화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기존의 자기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기 쉽다. 개인의 자기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그가 속한 공동체도 해체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로 세워야 한다.

세계화는 불가피 多문화 多인종 多종교세계를 열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21세기는 기본적으로 [多정체성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單一문화 단일종족 단일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이나 집단에게 정체성의 위기와 혼란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정체성을 지킨다고 지금까지의 單一 정체성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기본적으로 多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多정체성 안에도 사람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자기들에 알맞은 정체성의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자국문화(자국사상)와 이국문화(이국사상)를 어떻게 결합하고 융합하는가는 사람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 자기들에게 알맞은 [多정체성의 구조], 즉 새로운 자기정체성을 창조해 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자기 것과 남의 것을 어떻게 결합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자기 것을 창조해 낼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지금까지 21세기 세계화시대는 어떠한 구조변화 속에 있으며 그러한 구조변화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정책적 과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변화의 과제들을 풀어감에 있어 과연 우리민족은 어떠한 特長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장점을 어떻게 살리어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선진화]가 요구하는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자.

9: 우리 민족의 3대 特長

우리 민족에게는 많은 특장이 있으나 특히 다음의 3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3가지 장점 들을 잘 살려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적극 대응하면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會通의 사상.

회통사상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我와 非我的 적대적 투쟁으로서가 아니라 相依相生의 관계로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의 관계로 본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사상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그 사상의 차이를 도그마(dogma)화하고 絶代化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에게 통하는 보편적 통합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보편적 통합적 가치를 찾기 위한 성찰과 소통을 강조한다. 회통사상은 [불교의 緣起的 세계관]에서 영향을 받은 사상이라고 보여지며, 세상의 모든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하나로 묶어 내는 사상이다.

이미 앞에서 본바와 같이 세계화의 시대는 관계성이 중요해지는 시대이다. 따라서 개체를 절대화하는 사상보다 개체간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그리고 개체를 뛰어 넘는 통합의 가치를 중시하는 [회통의 사상]은 세계화시대에 특

히 필요한, 그리고 개인이나 개별국가의 발전은 물론이고 나아가 세계발전에
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회통의 사상을 가져야 다른
나라와 더욱 잘 대화하고 더욱 잘 협력하고 공조할 수 있다. 또한 회통의 사
상을 가져야 자국 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해와 나눔과 사랑이 보다 커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상호의존에 대한 이해와 관심
도 보다 커질 수 있다.

둘째는 正名의 철학.

정명의 철학이란 이름에 걸 맞는 실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유교적
전통에서 시작된 철학이다. 예컨대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
워야 하며,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철학이다. 즉
君君臣臣 父父子子이다. 각자가 이름에 걸 맞는 윤리와 도덕과 질서를 가져
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정체성을 세울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각자
가 올바르게 자기정체성을 세울 때 그들이 속한 공동체도 윤리와 질서를 가지
고 공동체적 통합성과 자기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정명철학은 大義名分과 원칙을 소중히 한다. 단기적 이익이나 편의
보다 장기적 명분과 의리, 그리고 원칙을 중시한다.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
보다 무엇이 옳은가를 중시한다. 이 가치는 특히 세계화시대의 선진화를 위
하여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다. 세계화는 분명 물질의 풍요를 가져오는데 이
것에 걸 맞는 정신의 성숙이 없으면 선진화는 실패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
에서 물질적 편의보다 정신적 가치와 원칙을 중시하는 정명철학은 세계화시
대 선진화의 성공을 위하여 중요한 철학이 된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세계화시대는 개인이든 공동체가든 자기정체성의 위
기가 일반화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정명철학을 통하여 우리가 각자의 자기정
체성을 확실히 세우고 지켜나가면 그것이 공동체가 자기정체성을 세우고 지
켜 나가는데 큰 계기가 되고, 그 결과로 개인의 발전과 공동체의 선진화 모
두에게 큰 기여가 된다.

셋째, 力動의 문화.

역동의 문화란 단절과 변화에 능하고 새로운 만남과 어울림에 능한 문화를 의미한다. 우리민족의 역동성은 騎馬민족의 전통과 우리 전래의 風流道에서 비롯된 것 같으나, 근세에 이르러서는 기독교 특유의 활동성 적극성이 크게 기여한 것 같다. 우리 민족은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도 해외개척(이민, 유학, 선교 등)에서의 역동성이 높다. 새로운 만남과 어울림에 대하여 적극적이다. 우리의 역사가 단절이 많아서인지, 단절의 고통을 비교적 쉽게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에 보다 적극적이고 수용적이다.

주지하듯이 세계화시대는 문명사적 변화의 시대이다. 따라서 변화의 능력인 역동성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 시대이다. 우리민족에게 있는 이러한 역동성의 가치는 세계화시대의 선진화를 위하여 크게 기여하는 자산이 될 것이다.

위의 3가지 장점은 모두가 동시에 작동하여 그 [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때 보다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3가지 특징이 각각 따로 따로 작동하면 장점이 단점으로 변할 수도 있다. 예컨대 역동성이 홀로 작동하면 소위 과도한 [쏟림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빨리 더워지고 빨리 식어지는 소위 [냄비근성]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역동성은 반드시 정명철학과 결합되어, 변화 속에서도 자기정체성과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함께 가야 한다.

또한 정명철학도 홀로만 작동하면 소위 도그마가 되기 쉽고 변화를 거부하는 [폐쇄적 경직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회통사상을 통하여 자기절대화 내지 도그마화를 거부하여야 하고, 동시에 역동성과 결합하여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정명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정명의 장점이 빛날 수 있다.

끝으로 회통사상도 홀로만 작동하면 [무원칙의 소극주의][편의적 보신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명철학과 결합하여 대의와 원칙을 세우려 노력하여야 하고 역동문화와 결합하여 현실타파의 적극주의로 개혁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회통사상의 본래의 가치가 살아난다.

이렇게 위의 3가지 특징이 모두 함께 어울려 잘 조화되어 나타나면 우리민족의 장점은 세계화시대 큰 재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명을 통하여] 자존과 원칙과 자기정체성을 지키면서, [회통을 통하여] 한 단계 높은

통합의 가치를 향하여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역동을 통하여] 그 변화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결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0: 선진화 5대 戰略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사회의 여러 부문 (국가 시장 시민사회)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 개혁시켜야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성공할 것인가? 5가지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세계화 전략

(1) 우선 우리 모두가 세계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계화 능력](globalization capacity)을 높여야 한다. 우선 세계와 적극 교류하고 의사소통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열린 창조적 세계화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열린 창조적 마음과 더불어 세계화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함께 협력하고 공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을 [세계화 능력(globalization capacity)]이라고 부른다. 외국어 능력, 정보화 능력 그리고 소통과 이해능력, 협력과 공조능력 등을 높여야 한다. 이 모두를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을 통하여 키우고 또 키워야 한다.

(2) 다음은 세계문명표준(global standards of excellence)을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조직, 제도, 교육, 사상, 문화 등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벤치마킹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세계최고수준(world class)의 제도, 조직, 교육, 사상, 문화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부, 기업, 학교, NGO 등 모든 조직과 제도를 세계최고수준에 맞추어 바꾸어 나가야 한다. 물론 세계문명표준을 벤치마킹 할 때는 무조건 100% 모방하려해서는 성공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리의 문화와 전통의 장점과 조화시키면서 우리식으로 창조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창조적 세계화(creative globalization)]가 필요하다.

(3) 우리의 세계화 전략은 제1의 [창조적 세계화]단계를 지난 후 반드시 [發信型 세계화]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 즉 우리의 전통과 문화의 장점과

결합하면서 세계표준을 배운 다음에는, 반드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새로운 세계표준을 만들어, 이를 세계를 향하여 발신을 할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즉 단순히 세계문명표준, 세계문화표준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새로운 세계문명표준, 세계문화표준을 만들어 세계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꿈을 가지고 그러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受信型 세계화]가 아니라 [發信型 세계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4) 세계화는 개인과 국가발전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과 정보가 들어오고 새로운 해외시장이 열리며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약의 기회가 열린다. 그러나 세계화는 불가피 국내외 경쟁의 격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실업 등 구조조정의 고통, 분배구조의 악화 등 경제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세계화가 [소수를 위한 세계화]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능한 다수가 참여하는 [다수를 위한 세계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언하면 [民主的 세계화]내지 [社會統合型 세계화]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세계화 전략 중 경제성장 전략이 중산층과 서민의 생산적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필수적이 될 것이다. 또한 그래야 [지속가능한 세계화]가 될 것이다.

(4) 세계화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내부의 국정개혁(예컨대, 공공부분 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등)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나름의 [대한민국의 세계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이상으로서의 선진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가이익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계를 향한 우리의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해방 후 지난 60여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전략은 대단히 취약하였다. 외교안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하여 왔다. 독자적인 세계전략을 세우기도 어려웠고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도 않았다. 경제통상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되어 온 세계적 자유무역체제의 발전의 물결을 타면 될 뿐이고, 독자적 전략을 세울 여지도 능력도 별로 없었다. 교육이나 문화의 경우는 세계전략이라는 개념자체가 생소하였다. 그래서 지난 60여 년간 우리는 독자의 세계전략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할 수 없다. 국제관계도 이제는 냉전이라는 양

극체제의 시대가 끝났고 다극체제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소수의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질서의 재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도 WTO 체제의 진전이 부진한 가운데, 개별 국가들 간의 FTA전략과 지역별 경제협력체 전략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자기주도적인 독자적 세계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왔다.

이 세계전략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이 글의 주제를 벗어나기에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기본이 되는 국가이익 중 가장 중요한 3가지, 즉 (1) 국가안보 (2) 경제번영 (3) 문화창달을 중심으로, 그의 실현을 위한 세계전략 중 그 핵심이 되어야 할 내용 하나씩만 간략히 언급하도록 한다.

(5) 우리의 세계전략은 첫째 동북아의 [단일 지역패권]을 막는 [평화전략]을 가져야 한다.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에 단일 지역패권이 등장하면 우리의 선진화 전략은 크게 제한을 받게 된다. 지난 역사의 교훈을 보면 쉽게 그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역사상 이민족과 격렬한 무력충돌을 200회 이상 하였다. 전국이 전화에 휩쓸린 경우만도 20회 정도이다. 이러한 충돌은 항상 동북아에 단일 지역패권이 등장하거나 혹은 두 나라가 지역패권을 경쟁할 때 일어났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지역에 단일 지역패권의 등장도 막아야 하고 지역패권의 경쟁도 막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 전제 조건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선 첫째 自強전략이 필요하다. 상당수준의 군사력과 경제력 확보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적어도 상대가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고는 공격을 감행할 수 없다는 정도의 강력한 자강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둘째, 同盟전략이 필요하다. 이 지역에 단일지역패권의 등장을 막는 것을 공동목표로 한 동맹국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말고 이 지역의 단일패권의 등장에 반대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특정국가가 지역패권에 성공하면 곧 미국과 세계패권을 경쟁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단일 지역패권의 등장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익은 일치한다. 우리에게서 미국이 가장 바람직한 동맹상대국이다. 셋째,

均勢이다. 세력균형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多者間 평화 안보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순서는 동북아 다자안보에서 출발하여 한축은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안보협력으로 다른 한축은 반드시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다자안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思想전략이다. 이웃 4強의 각국에 있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liberal internationalist) 들을 지원하고 이들과 연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4강의 어느 나라도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들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의 다수가 반패권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뿐 아니라 학자 등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국경을 넘나드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6) 둘째 대한민국을 세계적 투자허브(global investment-hub)로 만드는 [발전전략]을 가져야 한다.

선진화를 위한 세계전략의 하나는 대한민국을 [세계투자의 허브]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business R&D 투자의 2/3을 하고 있는 약 700개의 거대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들이 대한민국으로의 투자러시(investment rush)가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투자지역을 결정할 때 무엇을 중요시 하는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결국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경쟁력]이다. 그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창조적 인재들이 많은가? 이다. 다국적기업들은 세계적 인재(global talent)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다른 하나는 그 지역의 [도시경쟁력]이다. 즉 공공부문의 서비스, 물적 인프라 등이 기업하기 편한가? 또한 문화의 개방성과 특이성 등으로 그 지역에 외국인들이 살기가 재미있는가? 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즉 교육경쟁력과 도시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을 세계적 투자허브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선진화를 위한 세계전략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반드시 주목할 것은 세계화 시대 흐름의 하나는 열린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대두이다. 21세기 세계화시대의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의 하나는 시장확대이다. 거대시장에의 참여가 경쟁을 유발하고 특화와 전문화의 수준을 높여서 국민경제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유럽연합(EU)의 전략의 하나가 바로 유럽전체를 하나의 거대 단일시장으로 만드는데 있다. 그것이 세계화시대 유럽경제의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

서 우리의 선진화를 위한 세계전략 속에 반드시 [지역 경제공동체전략]이 들어가야 한다. 이웃나라들과 상호개방화를 위한 공동계획을 세우고 적극 앞장서야 한다. 그리하여 우선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더 나아가 동남아의 Asian까지 확대하여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나가면서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전략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도 만들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공동번영전략도 함께 논의하여 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21세기에는 우리는 유럽연합(EU)과 같은 아시아연합(AU) 더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연합(APU)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7) 셋째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아시아와 태평양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문화전략]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동아시아 문화전략을 시작하여야 한다. 유교문화와 대승불교를 기반으로 하여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이 함께하는 [동북아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승불교까지 포함시켜 베트남 타이 미얀마 등 일부 동남 아시아국까지 함께 하는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여 동아시아의 정신적 문화적 정서적 연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를 기초로 힌두교 이슬람교 그리고 카토릭과 기독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아시아와 태평양(북미와 남미)의 마음과 정신도 함께 묶어 나가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미 앞에서 주장하였지만 우리나라 문화와 사상 속에서는 (1) 會通 (2) 正名 (3) 力動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각국의 문화와 사상의 고유의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는 正名の 사상과 동시에 이 모든 상이함을 하나로 묶어내는 會通의 정신이 중요하다. 특히 회통의 정신이 있어야 여러 나라 국민들 사이의 정신적 감성적 연대를 만들어 낼 수 있고 그 결과로 지역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역동성이 있어야 이 문화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을 앞장서 주도할 수 있다.

둘째: 자유화 전략

(1)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존

중되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와 정책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역사발전의 원동력은 개개인의 자유와 창조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모든 제도 정책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창조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개인의 창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 자유의 보장과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함께 극대화하는 길이다. 다만 경계할 것은 우리사회에 일각에 남아 있는 [결과 평등주의]이다. 이것을 발전을 막는다. 인간은 본래 남과 달라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그것이 모든 발전의 계기가 되고 창조성의 모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회평등주의는 옳으나 결과평등주의를 주장하면 창의도 자유도 없고 따라서 발전도 선진화로 있을 수 없다.

(2) 개인의 창의를 자유의 극대화를 위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rule of law)]를 세우는 일이다. 법치주의란 본래가 두 가지 기능을 가진다. 하나는 국민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력의恣意적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능이다. 다른 하나는 올바른 권력의 행사에 정당성(legitimacy)을 부여 하는 기능이다. 전자는 권력에 대한 통제로 후자는 권력의 강화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기능이 모두 잘 작동할 때 법치주의가 성립하고 자유화는 성공한다. 한마디로 권력이 올바르게 강할 때 자유화가 성공한다는 말이다. 과도한 권력도 허약한 권력도 모두 자유화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우리사회에서는 권위주의적 잔재도 없애야 하지만 데모대에 얻어 맞는 공권력도 없애야 법치가 서고 자유화가 성공한다.

자유화를 위하여 우선 정치적으로는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언론의 자유 등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사적 재산권의 보호]와 [계약과 거래의 자유] 등 [私的自治의 원칙]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입법개혁] [행정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이 있어야 한다. 우선 [지킬 수 있는 법]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을 만드는 [입법개혁]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 그리고 불공정하며 비효율적인 법을 무책임하게 양산해 놓고 그 법집행을 임의

로 하면 법치가 아니다. 다음은 모든 법의 집행을 공평무사하게 하며, 행정 명령권의 남발 등 행정의 恣意를 최소화하는 [행정개혁]을 해야 한다. 아무리 공평하고 효율적인 법을 만들었다고 하여도 그 집행이 엄정하지 못하고 행정적 편의와 자의가 작동하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다. 끝으로 공정한 권리 보호와 효율적인 사법구제를 보장하는 [사법개혁]까지 해내야 한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고 집행한다고 하여도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법치가 아니다. 이상과 같이 입법 행정 사법개혁이 제대로 되어야 비로소 법치주의가 정착되고 자유화의 제도화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3) 자유화를 위하여서는 사회경제적 규제 중에서 [질서적 규제]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규제는 확실하게 해체하는 [脫규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남겨두어야 할 질서적 규제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든 시장의 자유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질서적 규제, 둘째는 자연 및 환경보호를 위한 질서적 규제, 셋째는 사회적 弱者보호를 위한 질서적 규제이다. 이상의 3가지 이외의 일체의 규제는 탈규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국민의 사회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私的自治에 기초한 시장질서라는 [自生的 질서(spontaneous order)]에 맡기어야 한다.

또한 [질서적 규제]의 경우에도 규제의 효과를 수시로 평가하고 규제기관을 효과적으로 감시 감독하여 소위 규제실패(regulation failure)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유화는 결국 [큰 시장과 작은 정부] 즉 작고 효율적이면 똑똑한 정부, 환언하면 強小정부를 수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선 위임과 분권을 강화하여 민간이 가능한 것은 모두 민간에게 지방정부가 가능한 것은 모두 지방정부에게 맡기는 공공부분의 개혁을 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大府大局으로의 정부부처의 과감한 통폐합과 공공부분의 대대적 민영화 그리고 철저한 지방분권의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앙정부는 전략기능 기획기능 그리고 질서기능과 조정기능에 국한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중장기 전략기획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경제기획원(Economic Planning Board)과 한국개발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이 국가 전략기획기능을 맡았는데, 오늘날과 같이 국가전략기능이 더 필요한 세계화 시대에 그 일을 맡아 하는 국

가기관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끝으로 자유화를 위해선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공무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정책실명제의 도입 등도 뒤 따라야 한다.

(5) 자유화가 가장 시급한 부문은 두 부문이다. 하나는 경제부문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부문이다. 경제부문에서 특히 서비스부문(금융 의료 건설 복지 법률 회계 등)의 규제가 큰 문제이다. 이 부분의 과다규제가 서비스부문의 국제경쟁력은 물론이고 제조업부문의 국제경쟁력까지 크게 나추고 있다. 이 부문의 자유화가 앞으로 경제적 선진화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부문이다.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관치경제]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오늘날 국가적 비효율을 낳고 있는 부문이 [관치교육]이다, 비록 관치경제를 한다 하여도 경제의 경우에는 치열한 세계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의 구조적 비효율이나 불공정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세계경쟁자체가 자유화의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의 경우는 세계경쟁에 직접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관치교육의 폐해가 오래가고 덜 들어나며 고치기도 대단히 어렵다.

학교선택권과 학생선택권의 제한, 그리고 학교 및 교사평가의 거부 등 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부족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여기에 각종의 교육규제가 교육부문에서 창의와 혁신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다수의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일류의 교육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학도 우리나라에는 일등이라고 하나 세계에선 63위에 불과하다. 북경대학이 14위 동경과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19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이 63위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물론 이 순위가 절대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국제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됨은 확실하다. 요컨대 관치교육 특히 [평등주의적 관치교육]이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파탄, 교실붕괴, 교육이민, 대졸실업자의 양산, 등을 결과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하여선 경제의 자유화 못지않게 교육의 자유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6) 끝으로 중요한 것이 자유화를 위해선 [탈규제와 관치청산]이라는 [대내자유화] 못지않게 [개방화]라는 [대외자유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대외

자유화를 통하여 세계적 문명표준 내지 문화표준 하에서 우리의 기업과 학교와 정부가 각각 [외국의 기업]과 [외국의 학교] 그리고 [외국의 정부]와 경쟁해야 한다. 세계경쟁을 통하여 배워야 자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음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혁신하고 선진화할 수 있다.

대외자유화와 관련하여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농업부문이다. 개방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향후 정책비로 김영삼 정부 때 약 57조가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약 45조가 농촌지원에 나갔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앞으로 2013년 까지 약 119조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보면 물론 일부는 농업의 생산적 구조조정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소비적 부문에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배분되었다. 이제는 결단을 하여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식의 나누어 먹기 식 농정은 안 된다. [생산적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세계경쟁이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확실하게 나누어야 한다. 전자는 구조조정을 대폭 지원하고 후자는 확실히 포기해야 한다. 그 대신 후자에게는 직업훈련지원 창업지원 다른 부분으로의 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분권화(多主體化) 전략

(1) 모든 중앙집권적 조직구조는 크게 축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모든 [돈과 권한]을 현장중심으로 분권화해야 한다. 우선 정부행정조직부터 철저히 분권화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기업조직 모든 학교조직도 보다 현장중심으로 분권화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는 변화에 능한 사람과 조직만이 성공한다. 중앙집권적 조직과 제도는 변화와 개혁에 더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권화는 단순한 분권화가 아니라 사실은 [多主體化]이다. 중앙집권의 單一 주체를 깨고 수많은 자기 완결적 자기 책임적 多주체를 만들어야 한다(기업의 경우는 分社化까지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자기권한과 자기책임 하에 환경변화(수요변화 포함)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자기 변화를 모색하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多주체화를 추진하면 중앙조직은 단지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획과 소통과 조정만을 하게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세계화시대는 [변화와 속도]가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속한 변화가 생명이다. 그런데 중앙집권의 거대조직은 신속한 변화를 할

수 없다. 그래서 分權化와 分社化, 즉 多주체화는 세계화시대의 시대정신이다.

(2) 다주체화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이다. 이것이 없이는 세계화시대 선진화에 성공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세계화시대 국가발전과 지방발전의 전략은 수개의 [경제적 강소국]을 만드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 환언하면 [경제적 연방제](정치적 독립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정책에 관한한 사실상 독자적 운영이 가능한)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계화시대는 첫째, 국제경쟁이 도시와 지역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이 중요해지는 시대이고 둘째, 변화에 능한,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強小國]이 성공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우선 세계화시대에는 [지역과 도시의 경쟁력]이 중요해지는 시대이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등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도시나 지역을 보면 그 지역의 인적자원의 질과 그 도시의 국제경쟁력(공공서비스의 질, 주거문화의 매력 등)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인적자원의 질과 국제경쟁력이 높은 곳에 투자와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지방의 발전을 위해선 우선 그 지역의 교육경쟁력과 그 도시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지방에 수개의 적정 인구 규모의 [경제적 연방제] 즉 수개의 강소국을 만드는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주지하듯이 21세기는 強小國이 성공하는 시대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나라들의 인구규모를 보면 아일랜드 400만 싱가포르 450만 필란드 500만 덴마크 500만 노르웨이 500만 스위스 700만 오스트리아 800만 스웨덴 900만 벨지움 1000만 네델란드 1600만이다. 대부분의 성공한 강소국의 인구규모가 500만-1000만정도의 수준이 가장 많고 크더라도 1500만 수준이다. 이런 나라들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세계의 안보 기술 통상 경영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서 필요한 자기개혁을 성공해 냈던 나라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4800만)에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강소국을 최소한 4-6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려면 중앙의 돈과 권력의 집중을 지방으로 철저히 下方하여야 한다(대부분의 세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지방이 자기 돈과 자기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이고 자생적인 자기발전계획을 짤 수 있어야 한다. 유럽의 강소국을 모델로 각 지역이 나름의 발전전략을 만들고 추진하여야 진정으로

지방이 자생적 발전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나라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발상아래서 일본에선 이미 전국에 12개 정도의 강소국을 만드는 道州制의 도입을 국가정책으로 결정하고 총리실 내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앞으로 10년 이내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구상의 실천에 착수하였다.

우리사회에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으나 실은 균형발전이란 말은 虛構이다. 사실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발전균형]이 옳은 말이다. 중앙정부가 모든 돈과 권력을 틀어쥐고 앉아서 균형을 목표로 한다고 지방에 몇 개의 정부기관을 이전하고 공장을 몇 개 보내는 식의 균형발전정책으로는 지방의 균형도 발전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중앙집권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서 口頭禪하 듯이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포폴리즘이다. 우선 철저한 지방분권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아니 단순한 지방분권의 단계를 넘어 [地方主權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사실상의 [경제적 연방제]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래서 경제적 연방제 하의 지방강소국들이 각자 나름의 발전전략을 세워 실천한 결과로, 각각의 강소국들이 발전하고 그 종합된 결과로 나라전체 발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正道이고 그 것이 바로 [발전균형]이다.

넷째: 自尊의 정신과 공동체 강화.

(1)세계화시대, 변화의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존과 자긍의 정신을 지키고 강화하는 일이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또는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자기가 속한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서,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자존과 자긍]의 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것 없이는 어떠한 세계화, 자유화, 분권화도 선진화로의 길이 되지 못한다. 자기 자신과 자기나라에 대한 자존과 자긍의 정신없이는 다른 나라에 대한 존경과 사랑도 상호협력과 공조도 불가능하다. 개인이든 국가든 자존과 자긍의 포기는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발전이 아니라 퇴보로 가는 지름길이다.

(2) 개인 국가 민족에 대한 자존과 자긍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가 시급하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바로세우는 일이다.

1980년대 修正주의란 이름의 좌파적 역사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1948년 이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공격하는 잘못된 풍조가 우리 사회에 팽배하여 왔다. 대한민국을 정의가 실패한 나라라고 주장하면서 학교에서 공공연히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친북적 좌파이념 확산을 목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건국이 조국분단의 시작이라는 주장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분단은 1945년 9월 20일, 北에 단독 적색정권수립을 지시한 스탈린의 특별지령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南에선 그것도 모르고 여운형 선생의 좌우합작노력 김구 선생의 남북협상노력 등이 지속되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南에게 분단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데도 이를 공공연히 학교에서 일부 선생들이 가르치고 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러한 좌파적 역사교육을 이대로 두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꿈임 선진화를 논할 수 없다.

어느 나라 역사든 明과 暗이 있다. 따라서 어두운 면을 극복하고 밝은 면을 계승하려는 [발전적 계승의 균형사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무조건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고 청산하려 드는 自己虐待的 역사관을 이대로 두고는, 개인으로서 국가로서 우리의 자존과 자금을 세울 수 없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성공할 수 없다. 과거를 부정하면서 희망찬 미래의 비전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학습하고 사랑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나라의 기본가치이고 규범이다. 또한 헌법은 바람직한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리와 작동원리에 대한 국민모두의 합의이다. 우리는 그 동안 이러한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 왔다. 헌법을 헌법학자의 관심사나 연구대상 정도로 생각해 왔다. 이래서는 안 된다. 국민모두가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기본가치와 규범을 배우고 생활화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풀기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가 등장하면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와 정신으로 돌아가 그 답을 찾아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선진국이고 선진국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좌파적 역사관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우리사회에 일각에 있다. 이 것을 크게 고쳐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고 사랑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루어 낼 수 없다.

(3)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이다. 세계화, 자유화, 그리고 분권화(다주체화)는 불가피 개인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창의와 선택을 중시하고 강조하는 개혁방향이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 공동체적 가치 내지 연대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인간은 본래가 개체적이면서도 관계적 존재 즉 공동체적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완성과 행복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약화시켜서는 이루어 낼 수 없다. 따라서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는 반드시 공동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함께 하여야 한다. 우선 [가족공동체]의 가치와 연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다음은 [이웃공동체], 그리고 [국민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촌 공동체]의 순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연대를 강화하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노력이 바로 올바른 선진화의 길이다.

(4) 이웃공동체 내지 사회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것이 올바른 [노동철학과 직업윤리]를 세우는 일이다. 이웃공동체나 사회공동체를 강화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헌금과 헌혈, 이웃 나눔과 이웃사랑운동 등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물론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것은 이웃공동체나 사회공동체의 존중과 강화는 공동체구성원들이 올바른 노동철학과 직업윤리를 가지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즉 자신이 하는 노동, 자신의 직업이 이웃이나 사회의 다른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노동철학과 직업윤리는 [사회적 분업노동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서 시작된다.

나의 직업노동과 이웃의 직업노동은 거미줄 같은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이 相依相補의 관계로 긴밀히 연결되어 거대한 사회적 분업관계를 만들고 있고 이 사회적 분업노동 위에서 인간의 경제사회적 생활이 가능하고 물질적 풍요가 생산된다. 그래서 나의 노동은 사회적 분업을 통하여 이웃의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자신의 직업노동에 정성과 열의를 다하는 것이 바로 이웃공동체와 사회공동체를 건강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그럼으로 결국 우리가 [국가이상으로 하는 선진국]이란 국민 각자가 자신의 직업노동에 최선(정직과 성실 그리고 열정)의 노력을 다하는 직업윤리와 노동철학이 바로 서고 이들이 滿開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사회가 바로 본인의 행복과 보람을, 그리고 이웃의 건강과 풍요를 함께 가져 오는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5) 어느 사회이든 사회경제적 약자가 존재한다. 특히 문명사적 변화와 구조조정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인 세계화 시대에는 사회 경제적 약자가 다량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에 뒤쳐진 그룹이 등장할 수 있다. 이들 문제에 대한 공동체 자유주의적 대응책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는 우선 공동체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안전망(fair and effective social safety net)을 구축하여야 한다. 문명사회라면 교육 보건 주택 문화 등에서 사회적 최저한(social minimum)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둘째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自救能力(self-reliance capacity)을 높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즉 그들에게 자신의 시장능력(직업능력 기업능력)을 키우고 발휘할 [기회와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그리고 자영업 지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세계화시대에는 자유와 경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도 사회 경제적 약자의 문제, 증대하는 빈부격차의 문제 등에 어떻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공동체적 가치와 유대를 강화하여 나갈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국가과제가 된다. 그래서 선진과 화합,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모두에 성공하여야 세계화시대 진정한 승자 즉 선진 성공국가가 된다.

다섯째: 국가 및 사회리더십 개혁

(1) 역사란 생각이 만들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라는 새로운 역사도 반드시 선진적 생각과 선진적 리더십이 있어야 가능하다. 국가 및 사회리더십이 선진적이지 못하면 새로운 선진화의 역사는 창조될 수 없다. 그러면 선진적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인가? 적어도 선진리더십은 다음의 4가지 덕목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선 [先公後私] 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리더는 국익과 공익, 공동선을 앞세우고 개인적 이해는 뒤로 돌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왜냐 하면 지도자는 私人이 아니라 公人이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끌고 나가는 사람이다. 따라서 선진화라는 공동선을 목표로 헌신할 의지에 불타야지 하고 개인의 사적 이해를 먼저 고려하는 생각은 결코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先公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선공을 하려면 두 가지를 하여야 한다. 하나는 [백성의 마음]으로 公務를 처리하여야 하고, 다른 하나는 [역사의 눈으로] 즉 역사의식을 가지고 公務에 임하여야 한다. 백성의 마음이란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을 보다 편안하게 하는 것(安民)을 목표로 공무를 처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자기의 편안함이 아니라 백성의 편안함, 즉 국민의 편안함이 목표여야 한다. 그리고 역사의식이란 오늘의 나의 행동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것이다. 역사의 자랑이 될 것이지 역사의 부끄러움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것이다 이 둘을 하는 것이 바로 先公하는 것이 된다.

둘째는 [정직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사적으로도 정직하고 용기가 있어야 하지만 특히 공적으로 정직하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사적 정직과 용기보다 [公的 正直과 勇氣]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면 공적으로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국가정책에 대하여 정직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국가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세계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하는 정직성이 있어야 한다. 당면 국가과제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하는 정직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공적인 용기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도자로서의 국정운영에 있어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용기이다.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는 용기이다. 국민의 도움을 호소하는 용기이다. 이러한 의미의 정직과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하지 않고 국민이 듣기 좋아 하는 말만하고 세상변화가 너무 빨라 국가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곧 모든

것이 잘 된 것이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만 하는 지도자는 진정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는 지도자이다. 이러한 포퓰리즘에 빠진 선동적 지도자가 가장 유해한 지도자이다. 이러한 선동적 지도자를 가지고는 선진화의 길은 결코 열 수 없다.

셋째는 [비전과 정책역량]이 있어야 한다.

선진적 지도자는 국가선진화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정책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문기술 관료들에게 정책기술은 빌릴 수 있지만 지도자의 비전과 철학은 빌릴 수 없다. 자기의 소신 없으면 몸을 던져 정책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선진화를 열 수 있는 변화와 개혁은 물 건너간다.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즉 비전과 정책을 지식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할 때 전문가들에게 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본인은 권력투쟁에서만 승리하면 성공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실패하는 지도자가 되는 첩경이다.

이제 국가경영을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다. 비전과 정책이 없이는 국가경영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시대이다. 그런데 비전과 정책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신념이고 사상이고 소신이다. 지도자의 비전과 정책은 오랜 연구와 사색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체득하고 자기의 사상과 철학이 되어야 진정한 비전과 정책으로서의 힘을 가지게 된다. 그 비전과 정책을 자기 스스로 확신하여야 국민들을 설득하며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다. 또한 지도자가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그 비전과 정책은 성공할 수 있는 법이다. 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지도자가 반드시 선진화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정책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는 [국제적 감각과 경륜]이 있어야 한다.

세계화시대에는 국가경영도 기업경영도 학교경영도 모두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할 수 없다. 호호탕탕 흐르는 세계의 흐름을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이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이다. 이 둘의 변화가 주는 국가안보상의 문제, 경제발전상의 문제, 사회통합의 문제, 문화정체성의 문제 등등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 나라의 지도자나 전문가들과 지구촌의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안목과 경륜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21세기 선진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 학교 종교단체 NGO 등 모든 국가 및 사회조직의 리더십들이 모두 출중한 국제적 감각과 경륜을 가져야 우리사회가 세계화 되고 자유화 되고 나아가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상의 4가지 덕목과 자질을 가진 선진리더십을 길러 내는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우선 우리 사회 일각에 팽배하여 있는 아무나 지도자가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고쳐나가야 한다. 우리사회가 지도자는 아무나 되거나 아무렇게나 되어서는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도록 되어야 한다. 지도자는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선공후사의 마음을 기르고 정직과 용기의 덕을 쌓고 국가비전과 정책능력 그리고 국제적 경륜을 축적하여 나가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초등학교부터 교과과정을 바꾸어야 한다. 지도자의 길과 덕목을 가르치는 동양유학의 四書(논어 맹자 대학 중용)의 주요한 핵심사항은 뽑아 반드시 가르치기 시작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李栗谷, 丁茶山 선생들이 주장하신 安民論과 牧民論 등 뛰어난 지도자학이 있다. 이것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물론 서구의 지도자학도 가르쳐야 하고 특히 동서양의 뛰어난 지도자(정치 경제 사회 문화방면의 지도자들)의 역사적 삶과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도 가르쳐야 한다. 정부 및 기업의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민단체, 문화단체, 종교단체의 교육프로그램 등에도 지도학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제도적 인센티브를 준비하여야 한다. 물론 대학에도 지도자학을 전공하는 학과를 두어야 하고 지도자학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전문대학원을 만들 필요도 크다.

(3) 선진리더십은 반드시 이론과 실무를 겸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론에는 밝으나 현장지식과 실천에 약한 선비들이 많았고 반대로 현장에는 강하나 이론과 개혁의지에는 약한 관료들이 많았다. 선진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에 모두 강한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이윽곡 선생께서

우리나라에 특히 부족하다고 한탄하신 更張세력 즉 改革세력이 앞으로는 많이 나와야 한다. 이론에 밝고 개혁의지에 불타면서도 현장지식과 실천에 강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인재들은 미국의 경우에는 부르킹스 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와 같은 민간정책연구소나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 (J. F. Kennedy School)과 같은 국가정책대학원에서 길러내고 있다. 불행이 우리에게서 그러한 문제의식도 걸 맞는 제도도 없다. 이들의 예가 타산지석이 되어야 한다.

(4) 세계화 시대 선진화를 이끌어갈 선진지도자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21세기 세계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정확히 읽고 그 변화의 내용과 의미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알려야 한다. 세계화시대는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임을 알려야 한다. 국민각자가 그리고 모두가 뛰어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임을 알려야 한다. 국가가 많은 것을 대신하거나 도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님을 솔직히 알려야 한다. 그리고 세계화시대에 국민성공을 위하여 국민각자가 스스로 해야 할 일과 정부가 도울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세계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키워야 할 장점과 버려야 할 단점도 정직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나 사회지도자들이 이러한 노력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버리는 棄民이다.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호언하고, 국민각자가 준비하여야 할 일을 준비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장담하면 이는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버리는 일이다. 국민 실패로 몰고 가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세계화시대에는 무엇보다 국민스스로가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 성공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自救노력 自助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다. 국가 및 사회지도자들은 이 점을 많이 강조하여야 하고, 그리고 정부는 국민 각자의 이러한 자구노력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하여야 한다.

(4) 그러면 과연 정부는 이러한 국민각자의 자구노력, 자조노력의 성공을 돕

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우선 정부는 장기국가전략(long-term grand national strategy)을 세워야 한다. 국가의 장기목표, 예상되는 대내외 환경변화, 전략적 목표와 추진 정책, 각 분야에서의 선택과 집중, 등을 세워서 국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안정적 예측을 가지고, 작자 자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다음은 정부가 자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선진화를 위한, 기업과 학교 등 민간부문의 개혁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들이 속한 공공부문의 개혁으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작지만 유능한 정부, 공기업의 민영화, 철저한 분권화, 경제적 연방제의 도입 등을 위한 결단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정부부문의 개혁은 사실 하나 하나가 대단히 어려운 과제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각 분야의 개혁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결단도 함께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정부 스스로가 선진화 개혁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기업 학교 등 민간부문의 선진화 개혁이 뒤 따라 올 수 있다.

셋째, 그 다음에는 정부가 민간과 함께(民官協治), 선진화를 위한 각 분야의 세계화, 자유화, 분권화(다주체화), 그리고 공동체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기본원칙을 확실히 지키며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선진화시대 대한민국의 정부가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맡은 시대적 사명이고 보람이다. 그리고 이들 선진화 개혁을 잘 해내는 것이 바로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한사람 한사람이 각자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自救自助노력을 가장 잘 도와주는 길이 된다.

21세기 세계화시대는 국민한사람 한사람이 성공해야 나라가 성공하는 [국민성공의 시대]이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 우리의 선진화도 결국은 국민 한사람 한 사람이 자존과 자긍의 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마음껏 뛰면서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 성공의 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국민이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21세기 선진화 시대 국가 및 사회 지도자들의 역할이고 사명이다.

11: 선진화 주체세력 : 國民統合과 3대 주체

어느 역사이든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때에는 새로운 역사의 주체가 등장하는 법이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화에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선진화의 주체 즉 선진화를 이루어 나갈 역사적 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면 누가 선진화의 주체가 될 것인가? 아니 누가 되어야 하는가?

첫째: 국민통합: 개혁적 保守와 합리적 進歩

우리나라의 선진화의 주체세력의 형성은 지난 60년의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나아가 함께 손을 잡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진화를 위하여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념적으로는 선진화 주체는 [개혁적 보수](신 보수)와 [합리적 진보](신 진보)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반선진화 세력인 수구적 보수(舊 보수)와 수구적 진보(舊 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대동단결하여야 한다. 보수든 진보든 守舊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제는 新 보수와 新 진보만이 역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에서도 강조하였지만 21세기 세계화시대는 끝임 없는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 보수란 무엇이고 신 진보란 무엇인가? 신 보수는 [자유주의][시장경제][성장주의][법치주의][대의 민주주의][세계주의]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장이다. 동시에 신 보수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는 점진적 지속적 개선(continuous improvement)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신 진보는 [사회정의][국가주도][분배 및 복지중시][법률주의][참여 민주주의][민족주의]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장이다. 동시에 신 진보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는 보다 급진적 개혁(radical reform)을 통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어느 주장이 옳은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선진화를 위해선 양자택일이 아니다. 둘 다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기하학적 중간을 선택하는 [중간주의]나 원칙 없는 [절충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신보수와 신진보를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통합하고 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통합하고 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는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때와 장소에 가장 잘 맞는 것을 동

양에서는 時中이라고 하였고 그러한 선택을 執中 혹은 中庸이라고 하였다.

21세기 세계화시대의 선진화를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자유, 시장, 세계] 등의 신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여야 한다. 그것이 국가전략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는 시대가 21세기 세계화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 보수적 가치만이 일방적으로 중시되면 반드시 [공동체의 약화] [정체성의 분열] 등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였다. 따라서 [사회정의, 국가, 민족]의 가치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21세기는 분명 신 보수적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주요전략이 되는 시대이지만 그렇다고 신 진보적 가치가 무시되어도 좋은 시대는 결코 아니다. 신 보수적 가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신 진보적 가치가 반드시 보완되고 보장되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시대이다. 한마디로 신 보수를 [기본원리]로 신 진보를 [보강원리]로 하여야 선진화가 가능하다. 그것이 21세기의 세계화시대의 시대적 특징이고 요구이다. 앞에서 우리가 [공동체자유주의]를 주장할 때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반드시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책임이 보완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기본적으로 그 축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변화의 방식에서는 신 보수와 신 진보 어느 쪽이 옳은가? 지속적인 개선이냐? 급진적 개혁이냐? 그것은 변화의 과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신 진보적 개혁이 필요한 과제도 신 보수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있다. 기득권이 강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이 어려운 정책과제 그러나 제도만 바뀌면 새로운 관행과 의식의 형성이 비교적 쉬운 정책과제(예컨대, 정부개혁)는 급진적 개혁이 필요하다. 반면에 대화와 설득으로 변화가 가능하고 또한 반드시 그러한 설득과정을 밟아야만 새로운 관행과 의식의 형성이 가능한 정책과제(예컨대 교육개혁)는 지속적인 개선의 방식이 옳다. 이와 같이 변화가 요구되는 정책과제의 성격에 따라 신 보수적 방식이 옳은 경우도 있고 신 진보적 방식이 옳은 경우도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신 보수와 신 진보는 국가발전에 모두 필요한 사상이고 가치관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보수와 진보간의 이념적 대립이 극심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사회 보수 중 일부인 舊 보수가 산업화시대 형성된 기득권과 관행에 안주하면서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 보수는 현실과 기득권에 안주하

여 자유주의, 시장주의, 법치주의, 세계주의라는 21세기 세계화시대가 요구하는 보수적 개혁까지도 거부 하려 했다. 자유시장경쟁을 거부하고 독과점을 지키려 하고 부패구조의 청산에 저항하려 했으며 세계화를 위한 21세기적 세계문명표준(예컨대 투명성 책무성 등)의 도입에 반대하여 왔다. 또한 우리 사회 진보의 일부인 舊 진보는 자신들의 진보적 가치를 21세기적 현실 속에서 제대로 살리려는 진지한 정책적 고민 없이, 이미 실패한지 오래되는 북의 主體사상이나 19-20세기적 국가사회주의(state socialism) 모델을 들고 나와, 자유주의와 시장주의와 법치주의를 거부하고 세계화를 공격하는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였다. 둘 다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한심한 수구적 태도를 보였다.

이제 이러한 구보수와 구진보가 갈등하던 시대는 빨리 끝내야 한다. 더 이상 시대착오적이며 시대역행적인 허구의 시대는 빨리 끝내야 한다. 그리고 보수는 21세기가 [자유, 시장, 세계] 등 보수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대임을 자각하고 그 보수적 가치를 우리사회에 보다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필요한 자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보수가 더 이상 이익추구집단이 아니라 가치추구집단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21세기 개혁적 신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동시에 진보도 21세기 세계화시대와 조화할 수 있는 새로운 [평등 복지 환경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舊 이념의 허구에서 빨리 벗어나 합리적 내용의 진보적 가치와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21세기 합리적 신진보]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개혁적 신보수와 합리적 신진보가 나타나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하여 서로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 보수는 과거 60-70년대의 산업화의 善경험(근면, 자조, 절약, 개척, 하면 된다, 등)을 물려받아야 하고, 신 진보는 과거 80-90년대의 민주화의 善경험(사회정의, 인권존중, 약자보호, 등)을 물려받아야 한다. 그리고 신보수와 신진보가 함께 노력하여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의 경험 중에서 惡경험 (독재와 부패, 권위주의와 관료지배, 독선과 선동, 법치와 기초질서무시, 등)을 버려 나가면서, 새로운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가발전의 동력을 다시 살려 한반도의 선진화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화합, 신보수와 신진보의 화합과 협력은 21세기 국가도약을 위하여 필수적 전제이다. 이제는 냉전종식을 계기

로 20세기적 의미의 구진보와 구보수의 시대, 즉 20세기적 좌와 우의 시대는 끝났다. 21세기 세계화시대의 선진화를 위해 앞으로는 진보적 가치와 정책, 보수적 가치와 정책을 모두 조화롭게 잘 활용하여야 하는 시대이다. 앞으로 21세기적 합리적 진보는 북의 主體사상이나 과거 19-20세기적 구 좌파가 지향하던 국가주의, 집단주의를 버리고 [공동체주의]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21세기적 개혁적 보수는 과거 20세기적 구 우파가 지지하던 관료독재, 권위주의를 버리고 [자유주의]로 나가야 한다. 공동체주의가 21세기적 신진보를 의미한다면 자유주의는 21세기적 신보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공동체주의와의 조화적 결합을 도모하는 [공동체자유주의]야말로 21세기 선진화세력의 기본철학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선진화를 추진할 주체세력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자. 선진화의 주체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선진화 정치세력]이고 둘째는 [선진화 정책세력]이고 셋째는 [선진화 국민운동]이다.

둘째: 선진화 정치세력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이 정치적 이념과 이상을 중심으로 그 이념과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인 근대적 의미의 정당 즉 [世界觀 政黨]이 아니었다. 세계관 정당이란 세계를 이해하는 확고한 사상적 철학적 틀을 가지고 그에 기초하여 개인행복과 국가발전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의 세계관 정당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우리나라 정당의 대부분은 대통령이나 대통령후보를 중심으로 개인적 이해나 지역적 연고관계에 따라 모인 [이익정당]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私黨]이었다. [이념 지향의 公的조직]이 아니라 [이익 지향의 私的조직]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권력획득의 방법도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비전과 정책을 설득하여 지지를 얻어 가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감정과 이미지 정치 그리고 포퓰리즘을 이용하여 지역, 세대, 계층 간 합종연횡을 통하여 다수표를 모으는 방식을 많이 취하여 왔다. 그래서 선거과정에서 항상 국가비전과 정책이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인물중심정당 지역중심정당 이익중심정당의 구각을 벗지 않는

한 대중영합 내지 대중조작의 지역주의와 포폴리즘은 불가피하고, 지역주의와 포폴리즘이 존재하는 한 선진화개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익정당] [지역정당]의 구각을 환골탈퇴하고 [세계관정당] [정책정당] [전국정당]이 등장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선진정당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 시대의 국가비전으로 확고히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구체적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단호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21세기 국가비전인 선진화는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다.

정치주체인 정당개혁 없이는 나라 선진화의 성공은 어렵다. 따라서 우리의 정계를 이념과 비전 중심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선진화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정책정당], [세계관 정당]을 등장시켜 이를 중심으로 선진화 정치세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셋째: 선진화 정책세력

국가발전은 이념과 비전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그 비전과 이념을 실현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운영능력을 가춘 구룹이 있어야 한다. 선진화가 성공하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선진화 정책자체가 첫째, 올바른 사상과 이론 위에 서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과거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 외국의 정책과의 비교연구 등등에 기초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이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 그러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직접 추진할 능력을 가진 선진화 정책전문가 구룹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산업화 근대화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평가 등은 사실 관료독점이었다. 관료들이 모든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발전과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이다. 21세기 문명전환의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선진화개혁은 관료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와 관리에 능한 守城세력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세력, 그러나 크게 부족한 세력은 소위 更張세력, 즉 개혁세력이다. 이론과 원칙에 강하면서도 현장 파악력과 조직 장악력, 그리고 업무추진력이 있는 개혁세력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이론과 실무, 이상과 현실을 결합시킬 수 있는 개혁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선진화 혁명이 성공하려면 먼저 창업세력(정치세력)이 선진

화의 길을 열고 개혁세력(정책전문가세력)이 선진화개혁에 앞장서고 수성세력(관료세력)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정책세력]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는 부르크스 연구소와 같은 민간정책연구소나 케네디스쿨 같은 국가정책대학원을 통하여 육성된다. 우리나라에는 정부연구소나 기업연구소는 있으나 민간부문에 경제적으로 독립되고 정치적으로 비정파적인 그러면서 오직 국익과 공익의 입장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민간정책연구소가 거의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학과, 행정대학원 등은 있으나 모두가 학자출신의 교수들만이 이론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다. 학자와 더불어 국정운영의 경험자들(전직 장관, 전직 국회의원 등)이 함께 국정운영의 이론과 실무를 함께 가르쳐 주는 국가정책대학원이 없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보다 다양한 독립된 민간정책연구소와 이론과 실무를 함께 가르치는 국가정책대학원들이 많이 나와 선진화 정책세력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넷째, 선진화 국민운동

국민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역사가 바뀐다. 함석헌 선생께서 [생각하는 국민이어야 산다]고 말씀하셨다. 정치가 중요하고 정책전문가들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생각]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다. 우선 선진화가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국민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이 선진화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모든 국민들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선진화는 결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세대의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후손들에게 선진조국을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선진화라는 공동목표와 조화시킬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민주화가 집단이익이나 지역이익의 무한추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제발전이 사적이익의 무한추구, 사리사욕의 해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선진화라는 공동목표우선의 정신, 사리사욕의 무한추구의 자제 등 개명된 [공화

주의적 시민정신(公民의식)]이 있어야 민주화도 경제발전도 나아가 선진화도 성공할 수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성숙하고 개명된 公民의식을 가져야, 정치에서의 지역정당, 이익정당의 난무와 이합집산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개명된 공민의식이 있어야 각종 선진화개혁(교육개혁 규제개혁 노사개혁 연금개혁 정부개혁 등)을 가로막는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선진화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치세력과 정책전문가들만으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식의 개혁, 생활문화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국민모두의 이해와 지지와 열망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그래야 선진역사의 창조가 시작된다.

12: 맺는말: 제2의 위대한 도약을 향하여

결국 대한민국이 선진화에 성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마음과 각오 그리고 준비와 노력에 달려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를 위한 자기변화의 노력, 자기개혁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선진화에 성공하여 앞으로 이 땅 위에서 살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세계일류국가로서의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우리나라의 시대적 과제이며 국가적 목표는 [근대화(modernization)]였다. 봉건주의의 농업중심의 사회를 혁파하고 국민주권의 시대와 공업중심의 산업화의 시대를 여는 것이 당시의 국가적 목표였고 시대적 과제였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그러한 국가과제를 푸는 데 실패하고 그 결과로 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래서 근대화라는 국가과제의 해결은 약 반세기 이상 미루어져서 1940-50년대의 건국(founding of independent nation state)의 시대를 지난 후, 1960년대가 이르러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우리는 산업화(industrialization)와 민주화(democratization)를 순차적으로 이루어 내며 드디어 근대화에 성공했다. 대한민국이 국가발전을 위한 [제1의 위대한 도약(the great first take-off)]에 성공한 셈이다. 이제 우리는 근대화에 성공하여 中進國의 선두주자가 되어 선진화라는 새로운 국가목표내지 국가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선진화(sunjinwha: becoming a world-class advanced nation)]라고 하는 [제2의 위대한 도약(the great second take-off)]의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는 [한반도 선진화(Korea's Sunjiwha)]라는 21세기적 국가과제, 국가목표의 달성이 지연되거나 표류되는 불운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국민모두가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혼신의 노력을 기우려 반드시 성공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서 100년 후 22세기에 살 우리의 후손들이, 1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일으킨 [한반도 선진화운동]이 성공한 결과로, 자신들이 지금 [世界上等國家인 先進國]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할 날이 반드시 오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大義]이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이다. 한반도를 지키시는 천지신명이시여! 한반도의 선진화를 위호하소서!